

광주 수돗물, 수질기준 전 항목 ‘적합’

페놀 포함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 45개 항목 불검출

광주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 본부는 정수장 2개소, 수도꼭지 150개소,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급수과 정별 시설 21개소 등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용연·덕남정수장은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60개)에서 페놀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 45

개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0.020~0.022mg/L, 기준 0.1mg/L 이하) 등 나머지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정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미생물에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도 등 11개 검사 항목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김도기 기자

북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6월 20일까지 20억원 규모...재정 투명성 제고

북구가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다.

올해는 오는 6월 20일까지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 있는 북구 생활권자의 제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하는 제안 사업의 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 정책사업(6억 원)’과 ‘지역 현안 사업(14억 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 정책사업’은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으로 구 전체 또는 2개 둘 이상의 주민 편의 증진하는 사업 또는 청소년·청년,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문화예술, 주민 안전 관련 시책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역 현안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으로 주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동별 특색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다.

올해는 오는 6월 20일까지 북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거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심 있는 북구 생활권자의 제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하는 제안 사업의 규모는 총 20억 원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구 정책사업(6억 원)’과 ‘지역 현안 사업(14억 원)’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 정책사업’은 사업비 1억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으로 구 전체 또는 2개 둘 이상의 주민 편의 증진하는 사업 또는 청소년·청년,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문화예술, 주민 안전 관련 시책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역 현안 사업’은 사업비 5천만 원 이하의 단년도 사업으로 주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 동별 특색사업 등이 해당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서구, 소상공인 함께하는 힐링음악회

5~6일, 동천동 유적근린공원 하부 광주천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5일에는 ▲JTBC 싱어계인2 우승자 ‘김기태’ ▲국내 유일의 전자 오케스트라 ‘클래트릭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며, 6일에는 ▲TV조선 대학가요제 출신 ‘유하은’ ▲지역 대표 트로트 디바 ‘진이랑’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이 밖에 광천·유덕·동천동 등 3개 동별 무대에서는 버스킹과 마술공연, 난타와 풍기타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전기 기타 여행, 스탬프 투어, 공유 자전거 및 피크닉 돛자리 무료 대여 등도 진행된다. 특히 동천동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기념하는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또한 이번 힐링음악회에는 피크닉존과 배달존을 운영한다. 배달이 가능한 착한가게와 골목맛집들이 참여하고 광주공공배달앱을 함께 운영한다.

/조선주 기자

전남,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 단속

나무의사제 정착·병해충 효과적 방제...30일까지

전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목 진료를 시행 중이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 행위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 등 위반사항을 단속함으로써 수목 진료에 대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순의 기자

전국 7개 공항 ‘방위각제공시설 개선사업’ 착수

제주·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공항 등 대형 참사 발생한 무안공항부터 개선사업 착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의 피해를 키운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에 대한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사고 발생 3개월여만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KAC)는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79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공사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항은 제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이 대상이다.

공사는 사단법인 한국항공구조학회와 제주공항 방위각시설 구조물 정밀분석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제주 방위각제공시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 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무

안국제공항을 비롯해 광주, 여수, 포항경주, 김해, 사천공항의 기존 방위각제공시설 기초구조물을 개선하기 위해 (주)글로벌메타와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계획 용역’ 계약을 지난 달 체결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항공정책, 토목, 환경, 건축, 항행시설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증위원회를 공항별로 구성해 설계계획용역 산출을 검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부터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순천경찰, 합동 캠페인 순천경찰은 2일 오전 8시 순천풍덕중학교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교통사고 예방, 청소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사이버 도박 근절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 풍덕중학교 교사·학생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다. /순천경찰서 제공

전남, 5월15일까지 자연공원 탐방로 통제...“산불 예방”

지리산국립공원 전면 통제...산악형 도립공원 4곳 부분 통제

전남도가 최근 경남·경북·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자연공원 탐방로 통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에 있는 자연공원 중 산악형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이 각 4곳씩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내장산·월출산·무등산, 도립공원은 조계산·천관산·두륜산·불갑산이다.

이번 통제는 도립공원 탐방로 27개 구간, 57.4km가 대상이다.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로의 경우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조계산·두륜산·불갑산 도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일부만

만 통제하며, 해당 공원관리청별 누리집 팝업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37개 있던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을 3월31일부터 227개로 확대했으며, 실시간 탐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립공원 구역 외 모든 산에 대해 산불 위험 해소 시까지 입산 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30%까지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광산구민 2명 중 1명 “군 소음 보상 4~5% 인상 적절”

1150명 설문...80% “소음지역 일하는 사람 보상받아야”

광산구에서 군 소음 보상을 받는 시민 2명 중 1명이 4~5% 정도 보상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가 아닌 소음대책지역에서 일하는 직장인, 노동자도 보상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았다.

광산구는 2일 군 소음피해 보상 제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민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62.6%는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36.4%, 매우 그렇지 않다 26.2%)’고 답했다.

군소음보상금 적절한 인상률에 대해선 가장 많은 47.5%가 ‘전년 대비 4% 이상 5% 미만’을 꼽았다. 2% 이상 3% 미만(21.7%), 3% 이상 4% 미만(19.8%)로 뒤를 이었다.

현 군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3.8%(불만족 24.2%, 매우 불만족 19.6%)로, ‘만족한다’(18.7%)의 2배를 넘었다.

보상의 근거가 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79.6%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범위를 거주자뿐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전일 시기, 근무지와 거리 등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는 규정에는 응답자의 35.7%가 ‘비동의’를 표하고, 대도시와 일반도시 간 최소 보상 기준에 차이를 두는 규정에 대해서는 38%가 ‘비동의’라고 응답해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인식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 소음 피해 수준에 대해서는 87.5%가 ‘심각하다’고 응답, ‘괜찮다’ 응답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일상 활동 방해(67.8%) △수면 방해(35.6%) △두통, 스트레스 등 건강 이상(31.5%) 등을 꼽았다. /이동기 기자

‘오월 버스’ 타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배웠어요

광주시교육청, 5·18 사적지 탐방 버스 첫 운행

“‘오월 버스’ 덕분에 우리 역사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광주학생들이 광주시교육청이 2일 처음으로 운행한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를 타고 5·18 사적지를 둘러봤다.

오월 버스는 체험 중심의 5·18 민주화운동 교육을 위해 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5·18 사적지를 둘러보며 민주·인권·평화·나눔·공동체 의의 5·18 광주정신을 체감할

수 있다. 첫 운행에는 광주동산초 6학년 1~3반 62명이 참여했다. 오전 9시 학교에서 오월 버스에 탑승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특히 관련 해설을 들으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슴 아픈 역사를 배웠다. 이어 5·18구묘지로 이동해 5·18영령들이 남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성덕고 2학년 학생 58명이 오월 버스를 타고 5·18사적지를 찾았다.

시교육청은 3월부터 오월 버스 사업 참여 학교를 모집해 총 44개 초·중·고에 87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과 역사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오월 버스’운행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동산초를 찾은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과 용기의 역사”라며 “‘오월 버스’를 통해 학생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기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교육청, 국제표준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추진

전남교육청이 조직 내 부패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을 추진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스템을 도입해 청렴 행정을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인증 준비 단계로, 4개월 동안 ISO 요구사항 교육, 부패 리스크 도출, 표준문서 작성, 내부 심사 등이 이뤄진다.

2단계에서는 문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고 3단계에서는 인증 뒤 3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 관리, 정기 갱신 심사를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유지한다.

‘계약 비위’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브로커 법정공방 예고

관공 계약 체결 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서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과 알선업자(브로커), 납품업자 등이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과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현 부장판사)는 2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본부장 A(58·구속)씨 등 임직원 4명과 B(51·구속)씨 등 계약 브로커 4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계약 체결 명목으로 과학관 임직원에게 현금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납품업자 C(53)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와 운영·시설부서 전현직 임직원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과학관 각종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받아 각각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인사를 잘하느니 감시하겠단며 과학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유출·열람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B씨 등 4명은 발주 계약 체결 알선을 해주고 계약 업체로부터 수십억 차례에 걸쳐 4억6000여 만원을 받고, 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인사비로 1억1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관공 계약 납품업자 3명은 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인사비 계약 대가로 총 256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 과학관 임직원들은 용역 계약과 물품 납품 계약 등 과학관이 발주한 계약 70건과 관련, 사업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대가로 인사비를 챙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